

# 國際化 趨勢와 韓國經濟의 進路

柳 莊 熙\*

## < 目 次 >

- I. 序 論
- I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新保護主義  
    擡頭
- III. 對外與件變化가 주는 示唆點
- IV. 政策方向과 對應課題
- V. 結 論

## I. 序 論

최근 한국경제는 成長 30年史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成長初期에서 80年代初에 이르기까지는 이른바 物理的 成長에 주력하면 되었기 때문에 資源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을 극대화하고 수출을 증진하는데 총력을 경주한 시기였다. 國際經濟의 여건도 이러한 韓國의 成長政策과 輸出爲主의 대외지향적 전략을 受容해 주는 데에 여유를 보여주었고 더구나 越南特需, 中東景氣, 三低現狀 등 예기치 않았던 國際經濟의 여건변화가 韓國經濟의 도약에 직접적인 轉機를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0年代 中盤에 들어서면서 世界經濟의 秩序는 韓國經濟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즉, 交易에서 연속적으로 赤字를 보이고 있던 先進國들이 중심이 되어 自國市場이 일방적으로 잠식당하는 현상에 대해 제동을 거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多者間合意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규범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구체적 작업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그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이에 추가하여 世界의 各地域에서는 지역특유의 利益을 옹호하고자 하는 경제統合 혹은 지역협력의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사실상 1967년 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함으로써 태동되었다. 그러나 同統合과정은 80年代에 들어서서 유럽諸國의 國際交易이 日本 및 急成長 開途國에 비해 부진현상을 보이면서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80年代 中盤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共產圈 붕괴현상은 마침내 힘의 論理에 의해 질서를 형성하고 있던 冷戰時代를 마감케 하고 이제는 先·後進國, 東西를 막론하고 利益의 大小(Balance of Interest)가 질서를 지배하는 새로운 市場雰圍氣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설계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要人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國家經濟의 成長과 發展이 과거와 같은 '物理的 計劃'에 의해서, 또는 政策的 公式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他國의 市場을 공략함으로써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나라의 경제가 國際經濟의 흐름에 參與하여 그 가운데에선 世界經濟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역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地理的 개념인 國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 經濟力이 活力을 지속할 수 있는 新經濟領域(Global Management Network)이 더 큰 관심사가 되었다.

對外指向型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韓國經濟는 政府나 企業을 막론하고 이러한 世界經濟의 變化속에서 化學的 役割을 찾아 나아가야만 한다는 大命題를 안고 있다. 따라서 몇년후면 先進經濟에의 도입이 예상되는 韓國經濟로서 과거의 開發政策을 支配했던 概念을 버리고 새로운 定義, 새시대에 맞는 價值觀, 새 秩序와 조화를 이루는 經濟哲學을 도출해 내야만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本 小考는 이상의 時代的 變化를 고려하여 앞으로 韓國經濟가 指向해야 할 國際經濟政策上的의 目標를 제시해 보고자 집필되었다. 제2절에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世界經濟의 주요흐름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韓國經濟에 미칠 충격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제4절에서는 主要 對外經濟政策課題를 세분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방향을 시사하여 보았다.

## I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新保護主義 擡頭

최근 국제경제 질서상에는 세가지 새로운 保護主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新시장보호, 기술보호 및 환경보호에 관련된 각종 보호주의 경향이다. 東・西間の 이념대결이 종식됨에 따라 국제관계는 軍事力에 바탕을 둔 힘의 均衡에서 經濟力에 바탕을 둔 이해의 均衡이 중시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90年代의 世界經濟는 미국경제의 상대적 쇠퇴, EC 및 日本經濟의 노력확대 및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부상 등 經濟的 多極化 現象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은 상당한 마찰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미・일간 경제적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GATT의 機能을 강화하여 工產品 貿易은 물론 農產物과 서비스 交易의 自由化를 달성하려는 多者間 國際貿易協商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당초 타결시한(90년 12월)을 훨씬 넘기면서도 타결전망의 보호 등 自國利益을 위하여 각종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교역상대국에게 市場開放壓力을 가하고 있어 국가간 통산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新市場 保護主義 추세이다.

이렇듯 UR을 중심으로 한 多者間 自由貿易秩序 構築이 지연되고 불확실해짐에 따라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는 地域主義 또는 地域內 排他的 協力強化의 方向으로 나아갈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 EC는 92년까지 단일시장 형성을 마무리짓고 궁극적으로 經濟・通商同盟과 政治統合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여타 西유럽國家間的 自由貿易聯合團體인 EFTA와의 統合方案도 推進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까지를 포함하여 北美3國을 하나의 自由貿易地帶로 묶으려는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을 체결시키려 하고 있다. 구체적인 地域經濟協力體가 형성되지 않은 亞・太地域에서도 1989년 亞太經濟協力閣僚會議(APEC)가 창설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호를 위한 각국의 政策的 변화도 또한 주시해야 할 분야이다. 이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自國의 技術을 보호하기 위해 知的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유출 혹은 침해를 강력하게 막기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고안되고 있고 또하나의 형태로서 各國은 특정기술이 外國人 혹은 外國企業에 대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各種 法律로써 同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최근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는 새로운 규범을 제정키위한 新分野에서 知的財産權(IPR)을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로 지목하였고, 일본에서는 産業技術保護法에 의거 日本이 개발한 200여종의 첨단 기술을 95년까지 절대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이 주요한 例이다.

環境保護도 또한 新保護主義경향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占하고 있다. 물론 RIO회의같이 지구온난화 방지, 생태계파손금지, 생물다양화 유지조치등 전반적인 환경 保護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진국들이 주동하는 무역관련 환경보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환경기준이 낮은 중진국으로부터 수출되는 製品에 대해서는 선진수입국들이 환경개선 요구조건을 들어 輸入을 금지 혹은 제한한다는 조치이다. 이른바 환경보호를 내세운 市場保護행위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世界交易의 질서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III. 對外與件變化가 주는 示唆點

이상에서 살펴본 90年代 國際經濟環境의 변화가 韓國경제에 주는 示唆點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開放壓力的 加速化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 불확실해짐으로 인해 새로운 교역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어 세계무역질서는 당분간 多者主義, 雙方主義 및 一方主義가 혼재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韓國과 같은 수출주도국가에 대한 개방압력은 미국 및 EC가 중심이 되어 거의 전분야에 걸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美·日간의 경제적 마찰 심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앞으로 世界經濟는 미, 일, EC를 축으로 하는 3極體制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 3極體制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일간의 마찰은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亞·太地域의 協力 強化이다. 多者主義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地域主義가 심화됨에 따라 亞·太地域에서도 經濟協力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경제블럭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넷째, 國際競爭力 提高 必要性的 增大이다.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중국을 비

못한 개도국의 도전은 工產品, 서비스 및 농업을 포함하는 全產業에 걸쳐 韓國 경제의 構造調整 및 國際競爭力 提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技術開發을 통한 生産性 向上 및 品質改善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國際社會에서의 責任 및 力量 增大 要求이다. 개방화가 본격화되고 韓國의 國際的 位相이 제고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정책협조, 국제규범 준수, 국내제도의 선진화, 對開途國원조 증대 등 여러형태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의 증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 IV. 政策方向과 對應課題

최근 國際經濟環境의 변화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國際社會에서의 韓國 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對外經濟政策을 개선의 차원을 넘어 개혁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多者間 體制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국내 무역관련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둘째, 쌍무간 마찰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美·EC·日本과의 주요 경제현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선진국들로부터의 핵심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地域主義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장개척 및 자원확보를 위해서 亞·太地域 및 대북방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對外經濟政策問題를 주제별로 살펴보고 각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

10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R協商은 4년여 동안의 협상을 마치고 1990년 12월초 브뤼셀 世界通商長官會議에서 그 막을 내릴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農產物協商에서의 합의실패로 연장되었으며 91년에 넘어와서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덩켈 GATT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책임하에 最終協商案을 작성·배포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農產物協商에서 國內補助金 지급허용분야와 輸出補助金 삭감에 대한 美國과 EC의 立場差異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농산물 이외에도 關稅를 비롯한 市場接近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協商 등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UR協商의 최종타결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현재 각국이 처해있는 정치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UR協商은 당초 協商目標보다 낮추어진 수준의 시나리오로 타결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2년말까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農產物, 서비스, 纖維, 反덤핑등의 분야에서 주요국간의 절충이 이루어져 덩켈 총장의 最終案이 일부 수정된 형태로 채택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협상력이 약하고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는 다자간 交易秩序體制의 강화야말로 雙方的 通商協力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분야별로 서면제안, 공식·비공식 회의참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동대처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 UR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모든 문제들을 美國, EC, 日本 등 선진국들과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對外的으로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對內的으로는 각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提高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UR협상의 타결노력은 한국의 協商能力을 고려할 때 限界가 있다고 하겠으나 최소한 農產物協商에 있어서 關稅化例外措置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UR협상으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市場開放擴大와 國內制度의 國際規範化는 通商摩擦의 緩和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한 產業構造調整의 촉진, 消費者 厚生의 增大, 獨寡占의 견제와 그 폐해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市場開放豫示制'를 통해 업계와 국민이 사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세워진 개방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業界의 적극적인 적응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의 무역정책의 대외공신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작업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절차, 인허가제도를 과감히 완화 또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는 市場開放 확대와 制度 및 規制의 개편으로부터 오는 短期的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產業構造調整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며, 商品交易 뿐 아니라 外國人投資, 서비스교역 등이 폭넓게 자유화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多國籍企業 등의 獨寡占 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韓・美 經濟協力

韓・美간 경제관계는 그간 한국측이 취하여온 貿易 및 直接投資의 自由化 조치에 힘입어 對美 무역수지가 黑字에서 赤字로 반점됨에 따라 통상마찰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측은 은행, 증권 등 광범위한 금융시장개방과 국내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통상마찰의 초점이 실물분야에서 금융분야로 옮겨지고 있으며 또한 금융마찰의 해결방식도 포괄적인 금융자유화와 金融市場 全般에 대한 政府의 規制緩和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韓・美의 금융문제는 국제수지 및 물가가 악화된 상태에서 제기되고 있어 國內에서는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측 입장은 지난 어느 통상마찰분야보다도 단호하며 한국의 금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韓・美 經濟關係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韓國政府는 3단계로 된 금융시장개방 일정을 작성중에 있으며, 그 중 '제1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시행계획'에 포함된 시행조치들은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제2단계 자유화 및 개방계획'도 6월말에 확정발표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금리자유화와 자본자유화조치를 제3단계(97년) 이후로 미루고 있어 한국의 금융자유화에 대한 미국측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아직도 자유화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懷疑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측은 본격적인 금리자유화가 실시되기 이전에 우선 국내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 내외간 금리격차의 축소등 거시경제적인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자유화의 일정이 조건부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측은 한국측이 열거하는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통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의 투자자금과 운전자금의 조달이 원활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韓・美간 금융관계는 전반적인 금융자유화일정의 단축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마련중인 제3단계 개방계획의 실시시기나 내용을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자유화와 실물부문의 연계, 그리고 금융자유화도 금리, 외환, 자본시장을 連繫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거시경제적 교란요인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政府의 計劃이 미국측에서 신뢰성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韓・日 經濟協力

韓・日 經濟關係에 있어서의 主要 현안으로는 韓國의 對日 貿易收支 적자의 擴大와 日本으로부터의 投資 및 技術導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對日 貿易收支는 만성적인 적자로 적자규모는 1986년 54億 4,000萬 달러에서 1988년에는 39億 3,000 萬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1989년부터 다시 增減하기 시작하여 1991년 87億 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今年에도 日本國內의 景氣不振으로 인한 日本企業의 輸出攻勢로 일본으로부터의 輸入이 增減될 것이며 대일수출은 일본국내의 수요침체 등으로 인해 부진이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에도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축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産業發展의 重點이 組立・加工에 두어진 결과 原資材, 中間材의 海外依存도가 높고 또한 이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은 韓國에 대한 最大의 投資國으로서 1991年末 까지의 總投資規模는 2,179件에 投資金額은 40億 2,000萬 달러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일본의 對韓投資는 급속히 감소하여 1990년에는 件數로 145件, 금액기준으로는 前年の 1/2 수준인 2億 4,000萬달러에 그쳤고, 1991년에는 112件에 2億 3,000萬 달러를 기록,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기술도입면에서도 對日 技術導入件數는 1991年末까지 총 3,812件으로 전체 해외기술도입전수의 약 50.7%를 점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감소하여 한국기업의 기술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급격하게 減少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技術供與도 減少하고 있고, 韓國에 대한 技術供與로 韓國企業과의 競爭이 擴大될 것을 우려한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韓國政府는 對日貿易收支의 赤字 縮小와 日本의 對韓技術의 積極적 移轉을 요구해오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兩國의 政策當局者間에 구체적인 實踐計劃을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일본측의 소극적이고도 무성의한 대응으로 정



부간 교섭에 의한 이들問題의 是正은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韓國政府는 日本政府에 대하여 對日貿易收支赤字의 축소를 위해 主要 對日輸出品에 대한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제거 등을, 기술이전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능인 연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치, 일본기업의 대한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한 일본정부의 개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한국측의 수입선 다변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일의존적인 산업구조, 임금인상 등에 의한 韓國商品의 競爭力 弱화에 있기 때문에 한국측의 대일무역수지의 개선은 이들 문제의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産業技術의 移轉問題에 대해서도 技術移轉이 기본적으로 民間企業의 商業的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간여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안인 무역수지 적자의 축소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 대한 감정에 치우친 배타적인 사회분위기의 완화 및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對日 貿易收支 赤字의 축소를 위해서는 한국측의 산업구조의 전환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組立・加工中心의 産業構造를 止揚하고 原資材, 中間材産業을 育成, 國產化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수요를 국산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대일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企業의 輸出競爭力을 強化하고 이와 더불어 일본의 시장구조와 일본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日本의 對韓技術移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對韓直接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投資環境이 시급히 改善되어야 한다. 日本內에도 노동력 부족, 노동시간의 단축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低級商品 分野를 중심으로 이의 海外移轉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내의 구조변화를 好機로 삼아 日本企業의 對韓 直接投資의 유치 및 이를 통한 對韓技術移轉의 촉진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4. EC 經濟統合에의 對應

EC는 유럽經濟의 活性化와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1985년 6월부터 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域內市場統合計劃을 발표,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商品, 勞動, 資本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域內移動을 방해하는 총 282개 항목의 貿易障壁들을 92년말까지 철폐하는 계획으로 92년 6월 현재 225개案이 각료이사회에서 최종 법안으로 채택되고 4개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되어 약 80% 이상이 추진완료되었다. 92년 말까지 稅制問題, 知的所有權, 交通 및 社會法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을 제외한 약 95%이상의 計劃들이 最終法案으로 채택될 것이며, 이중 80%의 법안들이 회원국들에게 실제 적용될 것이다.

92년도 계획은 域內貿易障壁의 철폐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진정한 域內市場의 自由化와 統合의 최종목적인 유럽合中國建設을 위해서는 經濟・通貨同盟(EMU) 및 政治統合(EPU)이 요구됨에 따라 92년 2월 7일 EC頂上들은 EMU와 EPU 推進을 위한 마스트리히(Maastricht) 歐洲同盟條約에 서명, 비준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EC는 統合 비준과 함께 전체 유럽을 統合地域(EC 12개국), 自由貿易地域(EFTA 7개국) 및 經濟協力地域(동구권 및 기타 유럽국가)등 3개권으로 나누고, EC를 핵으로 하는 나머지 2개 유럽圈을 끌어들이겠다는 汎유럽圈 형성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EC의 市場統合計劃이 域外國家들에 미칠 영향은 市場擴大라는 긍정적 측면과 貿易障壁의 擴大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EC統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면 세계 제일의 시장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統合의 深化와 擴大에 따라 나타나게 될 相互主義와 差別主義로 심각한 통상마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

이에 EC와의 원만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C 및 EC 主要會員國들과의 民・官 공동차원의 雙務接觸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EC의 對日本 經協에서 비롯된 對韓 피해인식과 韓國과 美國中心의 통상문제 해결방식에서 기인한 對EC 차별인식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쌍무접촉의 일환으로 EC와의 科學技術協力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계, 정밀화학, 신소재 등 EC의 比較優位分野로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게 좋을 것이다. 지역통합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EC地域內 현지투자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 EC지역에의 투자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製造業部門의 투자와 함께 기업진출지원을 위한 流通部門投資와 金融機關의 對EC 진출을 함께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亞·太 經濟協力

亞·太地域 전체의 GDP비중이나 수출비중은 세계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亞·太地域은 세계전체의 평균성장율을 능가하는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있고, 역내무역비중<sup>1)</sup>도 1989년에 67% 수준으로 달하여 높은 相互依存度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로 인해 亞·太지역에서도 域內國家間 經濟協力の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1989년에는 亞·太 經濟協力閣僚會議(APEC)가 창설되어 亞·太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政府次元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APEC 회원국은 본래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ASEAN 6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었으나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 홍콩, 대만이 추가되었으며, 무역확대, 투자 및 기술이전, 에너지 등 10개 협력과제를 선정, 추진중에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亞·太 經濟協力の 발전은 대외적으로 EC統合이나 UR이후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대내적으로는 양대 경제강국인 일본과 미국간의 역학관계, ASEAN의 독자행동, 北美 자유무역지대 확산 등 제반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APEC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다자간 협력체제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對EC 견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확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APEC은 참가국이 광범위하고 참가국간 이해의 상충이 있으므로 亞·太地域 및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ASEAN 및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비교우위에 입각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SEAN과의 協力事業을 충실히 추진해야 하고 나아가 經濟協力에 필수적 요소인 對開途國 資本協力を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6. 北方經濟協力

社會主義圈의 개혁·개방정책과 우리의 北方政策이 맞물려 과거 단절되었던 北方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교류·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舊蘇

1) 域內國間 輸出入 總量/域內國들의 全世界 輸出入 總量

聯, 東歐 등 9개국과 國交를 수립하고, 貿易・投資保障・科學技術・漁業 등의 부문에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中國과는 91년 이후 貿易代表部の 교환, 무역협정 체결, 투자보장 협정의 체결등을 통하여 經濟 교류・협력상의 많은 장애를 제거하였고, 최근 베트남과도 통상대표부 교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北方國家와의 경제교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들 국가는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주요 경제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

北方國家들과의 교역규모는 87년의 21억달러(우리나라의 총교역량의 약 2.5%)에서 91년에는 총 교역량의 5.3%에 달하는 81억달러(수출 38억달러, 수입 43억달러)로 증가하여, 4년동안 절대량으로는 약 4배, 비중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금년에 들어서도 中國, 베트남을 중심으로 급속한 交易增加를 보여(1/4분기중 22억달러, 수입 5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北方國家들에 대한 直接投資도 9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91년말까지 中國을 중심으로 200여건, 2.4억달러(韓銀許可基準)에 이르고 있다.

北方國家와의 경제관계는 전반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交易品目 構造에 있어서 우리는 전기・전자, 섬유, 기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2차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농수산물, 광물자원 등의 1차산품과 각종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상황이며, 投資에 있어서도 低賃勞動力의 활용(주로 中國, 베트남) 및 자원개발(蘇聯) 등이 주요 動機로 나타나 있다.

韓國은 초기 북방정책에서 政治・外交의 성과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北方國家들과의 경제적 互惠性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각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經濟協力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北方國家마다 경제적 특성 및 잠재력, 改革의 추진속도에 차이가 있고, 정치・사회적 여건 역시 相異하므로 이 차이를 감안하여 국가・지역별로 적합한 經濟協力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舊蘇聯과는 자원・기술면에서의 협력에 더욱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中國과는 풍부한 노동력 및 在中교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經濟協力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北方國家들에 대한 체계적・심층적인 연구와 정보수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7. 東北亞經濟協力

世界정치・경제질서의 再編과정에서 각 경제권역별로 地域主義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일본, 러시아, 중국, 남북한, 몽골 등 6개국은 정부·민간 兩차원에서 經濟協力에 관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東北亞地域國家는 經濟發展段階와 政治·經濟體制가 상이하긴 하나 지리적으로 가깝고, 産業·貿易構造上的의 相互補完性이 크며, 人的·物的자원 부존지인 중국 東北지방 및 러시아 極東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經濟協力の 잠재력이 풍부하다. 더욱이 市場과 産業技術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을 보이고 있는 東北亞地域 국가간의 經濟協力は 輸出入市場을 多邊化할 수 있는 기회도 또한 제공해 주고 있다. 政治的으로는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北韓을 多者間 經濟協力の 場에 끌어냄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남북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統一에 대비한 經濟統合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UNDP의 주관하에 논의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도 東北亞地域 국가간의 經濟協力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同 사업의 성공여부는 政治·經濟體制가 상이한 아시아국가간에 多者間 經濟協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실험하는 일종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다. 豆滿江開發事業의 최대결립돌은 接境當事國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각기 다른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인 바, 現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들 3개 접경 당사국의 상이한 인식과 이해를 조정하고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소요 투자재원을 조달할 것인지가 同 사업성공의 주요한 關鍵이 되고 있다.

북한측의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 開發構想은 중국의 ‘防川港 개발 및 豆滿江의 商業的 運河化에 관한 計劃’ 보다는 經濟性과 實現可能性면에서 유리하고, 국내 政情의 불안과 지방정부간의 이해 대립에 직면한 러시아의 ‘大블라디보스톡構想’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지도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獨自開發方式만을 고집하고 있고 특정 小地域에 대한 主權의 一部양보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同 事業이 여러나라의 참여속에 多者間의 協力開發事業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으로서는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이 多者間의 國際協力開發事業임을 감안, 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의견과 입장을 청청·주시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측의 開發構想이 經濟的·技術的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相對的 優位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의 검토해야 할 것이다.

## 8. OECD와의協力

韓國과 OECD간의 協力增進은 韓國의 經濟力 伸張에 상응하는 國際的 役割의 提高 및 나아가서 선진국과의 정책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韓國經濟의 總量規模 확대 및 交易內容의 다양화로 세계 주요선진국들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해지고 이에 따른 정책협의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OECD와의 협력은 多者間 協議의 활용, 個別會員國과의 의견교환·조정을 통해 先進國과의 對外經濟問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외경제문제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先進型의 經濟運用方式의 도입에 필요한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특히 韓國經濟의 先進化 目標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90年代의 새로운 이슈가 되는 환경, 원자력문제뿐 아니라 對東歐協力, 産業構造調整, 對開途國 지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韓·OECD 관계발전은 자유화 추진속도에 있어 韓國경제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開發援助가 확대될 부담이 있다. 특히 운송, 은행, 보험 등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직접투자, 증권거래 등 資本移動의 自由化 義務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韓·OECD協力は 부분적·단기적으로 초래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國際化·先進化라는 경제운용의 목표에 得이 되는 측면이 보다 많으므로 각 분야별 韓·OECD協力關係는 적극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意義와 배경하에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OECD와의 협력 및 대화를 증진시켜 왔으며 1992년부터 시작하는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은 對OECD協力방안뿐 아니라 계획기간이 끝나는 1996년에는 OECD의 정식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심각히 고려할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韓國은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OECD와 아시아 고도경제성장 6개국(韓國,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워크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참가해 오고 있다. 1991년에 한국정부는 對OECD 조사단을 2次에 걸쳐 파견하여 OECD 사무국으로부터 OECD의 기능, 역할 및 회원 가입 조건등을 조사하여 왔으며, 1992년에는 OECD 貿易委員會의 옵서버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위원회에의 참여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先進國間의 經濟關係에 역점을 두어 각 분야별 OECD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韓・OECD 協力關係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OECD가입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各 委員會의 性格・機能에 따라 활동참여를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한・OECD간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호의견 교환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OECD 事務局과의 정기적인 協議채널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OECD 관련 사무국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간밀하게 情報 및 意見を 교환하고, 우리의 활동참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사무국(經濟統計總局, 金融・財政事務局, 貿易局, 國際에너지機構 등)에 공무원을 파견・연수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7次計劃期間 후반기에 OECD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UR과 연계한 개방정책 및 국내제도의 整備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金融 및 資本市場 自由化計劃의 착실한 추진과 후속 개방 및 보완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고, 貿易 및 產業關聯制度를 國際基準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對開途國公의開發援助(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가입에 따르는 分擔金 등 예산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OECD에 대한 國內 弘報를 강화하고 認識提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OECD에 대한 국내의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對OECD 관계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結 論

對外指向型, 輸出主導型 성장전략으로 30년을 달려 온 韓國經濟는 지금 1人當 GNP가 6,500달러를 넘는 중진국 상위권에 올라와 있으며 數年後에는 先進國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제의 先進化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경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으며 특히 국제화추세에 민첩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 當爲性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國際經濟의 新保護主義추세(시장보호, 기술보호, 환경보호)는 앞으로도 對外指向型 발전을 지속코자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라기 보다는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韓國의 對外經濟政策은 지금까지의 受

動的, 방어적 정책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轉換과 改革의 수준에 이르는 획기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世界經濟 흐름 가운데 受惠者로서가 아닌 被害者로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着手해야 할 일은 국내의 무역관련 각종 제도와 관행의 틀을 先進國型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은 多者間협상에 늘 참여하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국내제도와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일은 對外的 信賴度를 크게 손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雙務間 마찰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3大支柱가 될 美·日·EC와의 경제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현안문제들을 능동적으로 개선·타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韓國經濟가 앞으로 產業構造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生産技術과 環境保護方式을 도입치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雙務間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는 諸般장벽을 우리 스스로 헐어낼 수 있는 연구와 사전 준비작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로 深化되어가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처키 위하여 韓國은 亞·太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및 對北方經濟關係 확대전략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多者間 개방형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對EC 견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이지역에서의 日本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견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內在的 가능성과 對外的 적응력은 지난 30年동안 긍정적으로 評價받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國際化時代에 대처하기 위해 韓國은 輸出과 成長일변도의 개발전략에서 탈피하여 國際社會에 同參·協力하면서 세계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主役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